

##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 01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추진부서 안양시 정책기획과 ☎ 031-8045-2211

###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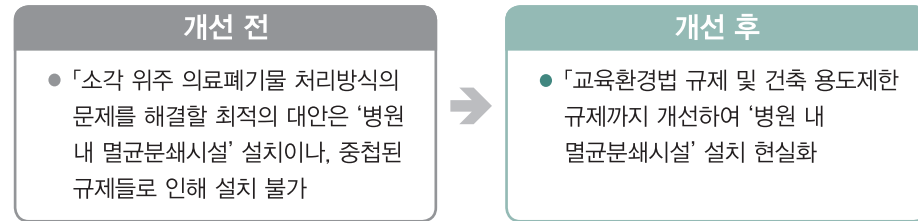


- 소각 위주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의 치명적 문제점
  - 고령화로 폭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14곳 뿐임.
  - 결국 의료폐기물이 2차 감염 위험을 신고 소각장을 찾아 장거리 이동하게 되고, 소각장의 독점적 구조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급증하게 됨. 또한 소각 방식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최적의 해결책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하여 부피를 대폭 줄여서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시설
  - 안전성(병원에서 바로 멸균처리로 감염 위험 예방), 경제성(처리단가가 낮은 일반폐기물로 배출), 친환경성(非소각방식)으로 선진국 등에서 이미 세계적 추세임.
- 그러나,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막는 중첩규제
  - ① 교육환경법 규제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내) 폐기물시설 금지 규정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사실상 거의 차단되었음.
  - ② 건축용도 제한 규제
    - 불명확한 ‘병원의 부속시설’ 해석 기준으로, 멸균분쇄시설을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닌 별도의 폐기물시설로 해석할 때 건축 용도제한\*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
    - \* 건축 용도제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등)에 따라 특정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
- 즉, 지자체별 건축허가 담당자가 ‘멸균분쇄시설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해석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음.
  - ※ 관련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멸균분쇄시설 처리방식(예)



## 개선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신설로 교육환경법 규제 개선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적 유권해석 도출로 건축 용도제한 규제 개선
  - 「멸균분쇄시설은 병원의 부속시설로서, 건축용도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19.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교육환경법 규제 발굴
- '19. 12. ~20. 0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실패),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안건 상정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10회
- '20. 09.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신설
  - ☞ 교육환경법 규제 개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 '21. 0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건축 용도제한 규제 발굴
- '21. 03. ~21. 07.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건의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40회
- '21. 0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출
  -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 가능」
- '21. 08. ~22. 03. 국무조정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44회
- '22. 0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 '22. 04.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도출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을 「의료법」상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
  - ☞ 건축 용도제한 규제 개선(건축 용도제한 없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 개선효과



-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여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연 1,685억원(추산) 절감으로 의료보험 수가 합리화 기대
- (탄소배출량 80% 감소) 소각 위주 방식의 문제 해결로 탄소중립 대응
-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 해결
- 고령화와 신종감염병 등 미래 시대의 위기 대응, 바이오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2021. 06.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2021. 11.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개선과제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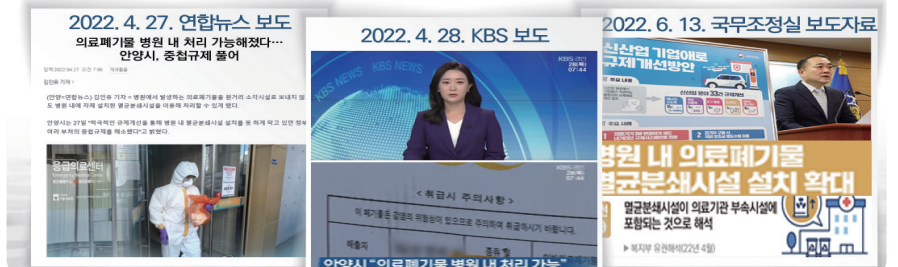
2022. 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 추진과정



## 2년 5개월 만에 중첩규제까지 해결



## 세상을 바꾸는 규제혁신, 안양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안양시 정책기획과 권구현 031-8045-2211

안양시의 2년 5개월간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시는 2019년 멸균분쇄시설 관련 교육환경법 규제 발굴 후 관련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도전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의 노력 끝에 2020년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뿌듯함도 잠시, 2021년 더 큰 장벽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건축 용도제한 규제'였습니다.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건축허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건축 용도제한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역시 수용불가 답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다수 부처가 얹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특성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가리지 않고 전국과 소통했습니다. 각지의 다양한 기업,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무작정 연락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갔습니다. 소관부처를 직접 설득하기도 하고, 새로운 규제개선 논리를 3차에 걸쳐 개발하는 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간담회」는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규제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전의 과정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지고, 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안양시의 2년 5개월의 도전은 중첩 규제 해결로 이어졌고, 이제 전국 병원에서 건축용도 제한 없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보험 등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양시는 이제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와는 차원이 다른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추진 동력을 지원해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규제개혁을 직접 추진하느라 늘상 바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을 비롯하여, 적극행정·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국무조정실 등과의 소통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규제혁신, 안양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